

kiri Weekly

2014.1.27 제269호

포커스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위험요인과 시사점

글로벌 이슈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와 시사점

IMF의 세계경제전망 상향 조정과 정책권고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위험요인과 시사점

최 원 선임연구원, 채원영 연구원

요약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Global Risks 2014’ 보고서는 31개의 글로벌 위험요인 가운데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소득불균형 심화를, 그리고 발생 시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인으로 주요국 재정위기를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균형 수준이 비교적 높아졌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주요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도 글로벌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함. 또한 늘어나는 빈곤층 복지 수요 충족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공·사 부문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이 필요함.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¹⁾ 개최에 앞서 발표된 ‘Global Risks 2014²⁾’ 보고서에서는 향후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31개의 글로벌 위험요인을 제시함.

- 개별 위험요인 가운데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는 심각한 소득불균형 문제가 제시되었으며 구조적 고실업 문제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함.
- 주요국 재정위기 문제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인으로 선정됨.

■ 소득불균형 심화는 사회적 갈등,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경제시스템의 불안정 등을 초래하여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 International)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1%가 전 세계 부의 절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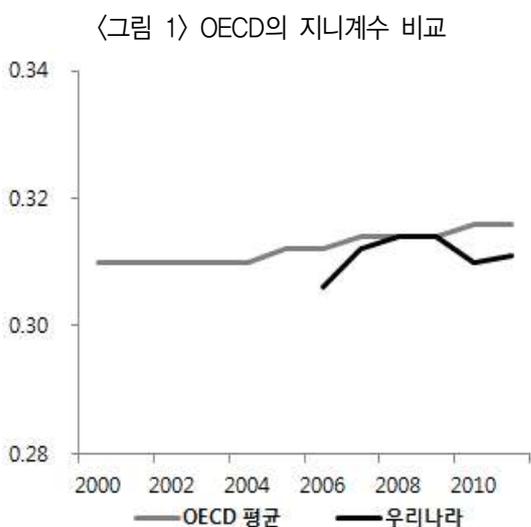
1) 정·재계, 언론계, 그리고 학계 등 글로벌 리더들이 세계적인 현안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포럼을 말하며, 1971년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주최한 유럽인 경영심포지엄에서 시작됨.
 2) 각 분야의 전 세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을 선정하여 발표함.

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소득불균형 문제도 부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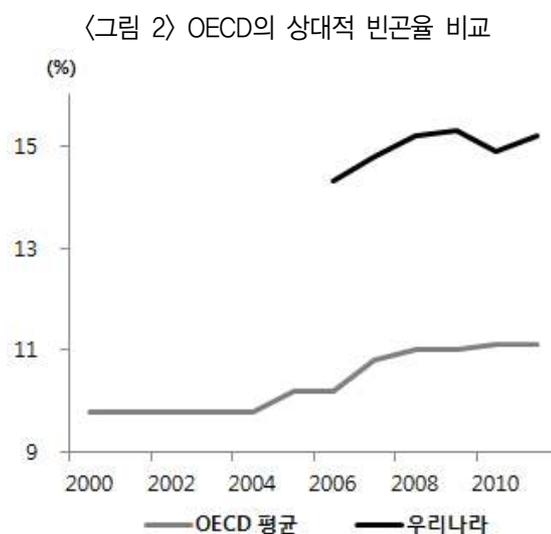
- OECD는 금융위기 직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 빈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음.³⁾

■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니계수⁴⁾는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 빈곤율⁵⁾은 OECD 평균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자료: OECD.



자료: OECD.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지니계수는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고 빈곤층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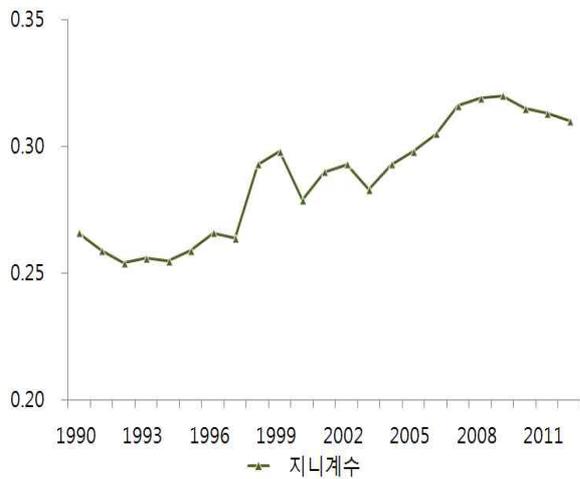
3) OECD(2013), "Crisis squeezes income and puts pressure on inequality and poverty".

4)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울수록 불균형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함.

5)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의 인구 비중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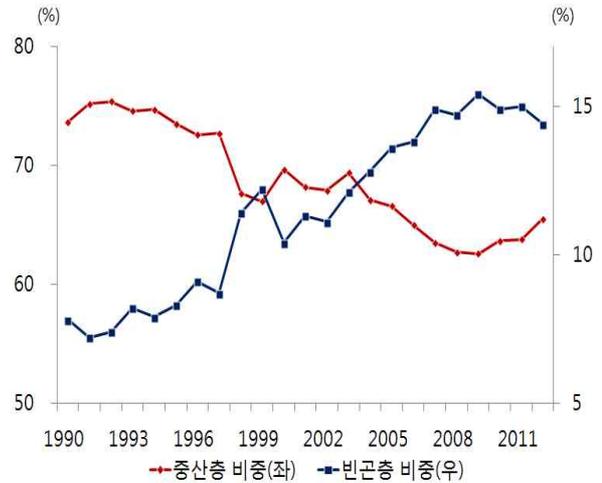
6)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 미만 계층을, 빈곤층은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을 의미하며, 통계청 자료를 참조함.

〈그림 3〉 우리나라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근로자)



자료: 통계청.

〈그림 4〉 우리나라 중산층/빈곤층 비중(2인 이상 도시근로자)



자료: 통계청.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 실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충분한 고용 창출이 동반되지 않는 경기회복세는 소득불균형 확대로 인한 사회갈등을 가중시킬 수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2013년 전 세계 실업자 수가 2012년보다 500만 명 증가한 2억 20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2억 1,5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2014년 전 세계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보다 0.6%p 높은 수준인 6.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향후 5년 동안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함.
- 특히, 전 세계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높은 청년 실업률 문제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중 확대로 인한 고용의 질 악화가 세계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꼽힘.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실업률은 2012년 기준 3.2%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9.0%로 전체 실업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5〉 주요국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 비교(2012년 기준)



자료: Bloomberg, OECD.

■ 한편, 선진국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주요국 재정위기를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제기하고 있음.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일부 유로존 국가들의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00%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유로존 경기회복세가 국가채무 규모 축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함.⁷⁾
- 미국과 일본의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105.9%, 243.5%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양적완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이후 국가채무 규모의 축소 방안이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추정되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율은 12.5%로 높게 나타남.
 - 일부 전문가들은 4대 연기금 부채와 공기업 부채 등을 국가채무에 포함⁸⁾할 경우 현재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주장함.
- 향후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와 가계부채 문제 등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7)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012년 기준으로 발표된 추정치를 참고함.

8) 국제통화기금(IMF)은 확정채무만을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음.

〈표 1〉 주요국 국가채무 비율 및 연평균 증가율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2013년 ¹⁾)	35.7	105.9	243.5	80.3	93.4	132.2	93.7	175.7
연평균 증가율 (2000~2012년)	12.5	9.8	3.9	4.9	6.9	3.6	7.4	6.6

주: 1)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된 추정치를 사용함.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 우리나라도 글로벌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글로벌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불균형 개선과 재정효율화를 모색해야 함.
 -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여건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거시정책 마련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 노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한편,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공·사 부문의 효율적인 역할제고 방안이 필요함.
 - 빈곤층 확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는 반드시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논의가 동반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복지 지원은 지양해야 함.
 -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시스템 내에서 늘어난 빈곤층에 대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험산업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kiri